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교협의 역할

● ● ● 황 인 철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이자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임의 단체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임을 주지하고,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서 소통 기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는 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82년 발족 이래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중요한 기관의 하나로 성장하여 왔고, 고등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의 성격도, 대학 구성원도,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교협의 역할과 활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고등교육체제에서 존재하거

나 발생하는 문제를 과거처럼 규제와 직접적 개입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대학의 자발적·적극적 협조와 대학과 정부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존재하는 중간기구(intermediary body)의 자율조정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교협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고등교육의 변화에 맞게 대교협의 역할이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하는지 정부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등교육의 변화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 동안의 대교협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교협의 성격을 모색한 후, 그 성격에 부합하는 대교협의 역할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고등교육의 변화

OECD, UNESCO, World Bank 등 국제 기구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정보화·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고등교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종 보고서¹⁾를 발간하고 있다. OECD가 2006년 6월 27~28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교육장관회의의 주제가 고등교육이었으며²⁾, 고등교육 분야(정확히는 제3차 교육 - The tertiary education - 분야)³⁾에 대한 주제검토(thematic review)를 수행하는 이유도 고등교육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⁴⁾.

이들 국제기구들은 특히 국고등교육의 국제화(internalization)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결합됨으로써 '국경 없는(borderless)', '초국가적(transnational)', '국경을 뛰어넘는(trans-border)', '국경을 가로지르는(cross-border)'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는 계기를 가져오고 있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서비스에 무역(trade)과 산업(industry)적 관점이 접목되고 있고, 고등교육체제에서 시장기제의 작동이 중시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즉,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아탑적 교육관에서 교육산업적 교육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학은 순수학문연구와 진리탐구적 역할을 넘어 이제는 시장경쟁 원리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적 역할을 그 바람직성 여부를 떠나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국적(multi-national) 학교, 기업대학(corporate university)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비스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수업연한의 경직성도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상공간을 활용한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교육과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격(qualification)과 인증서(certificates) 등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관련이 있다. 그에 따라 학사·석사·박사와 같은 전통적 학위 중심 사고에서 학위를 포괄하는 자격 중심 사고로 전환되고 있으며, 학생(교수)·프로그램·교육기관의 이동도 자유로워지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수요에 따른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 보증(quality assurance)체제와 자격(학위와 각종 이수증 포함)의 통용성과 호환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즉, 고등교육의 최근 동향을 정리

1) 예를 들면, UNESCO는 "Higher Education in a Globalized Society(2004)", OECD는 "Internaliz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04)", "Quality and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The Cross-border Challenges(2004)", World Bank는 "Constructing Knowledge Societies: New Challenges for Tertiary Education(2002)"을 발간한 바 있다.

2) 주제는 "Higher Education: Quality, Equality, and Efficiency"이다.

3) 고등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고등교육이란 용어뿐만 아니라 제3차 교육이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4) 동 주제검토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07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5) WTO/DDA 협상과 GATS 체제, 그리고 FTA 추진 등은 이러한 환경변화의 산물이다.

하면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경제성장,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에서는 초·중등교육이 교육체제의 중점이었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과 성인의 재교육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등교육(계속교육 포함)이 중시되고 있다. 관련하여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팽창하는 성인의 평생학습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된다. 셋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해지고 고등교육 이수자나 재학생이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하였으나, 학습의 성과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나 2~4년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정 시스템 구축이 자격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고등교육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그 양적인 팽창에 걸맞은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격체제 구축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형적으로는 많은 고등교육 희망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참여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물질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통한 성장전략이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수(educational attainment)는 엄격하지는 않지만 인적자본의 총량(stock)의 대리변수

(proxy)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행복(well-being)을 가져오고 지식, 기술(skills)과 직무수행능력(competencies) 습득이 사회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교육이 이러한 인적자본 확충의 핵심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2001년부터 담당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한 것이다. 자격체제 개편 역시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지 2년 이하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인정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Ⅲ. 대교협의 기능과 주요사업

고등교육 변화에 따라 대교협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교협의 기능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기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대교협법) 제3조(기능)에 의하면 대교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①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②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③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④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⑤ 대학의 평가, ⑥ 대학 교직원의 연수, ⑦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⑧ 기타 대학 상호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이다. 또한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교협의 정관에 의하면 ① 대학교육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학생선발 및 지도에 관한 연구개발, ③ 공납금책정에 관한 사항, ④ 재정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⑤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⑦ 대학 간 교수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점교환 인정에 관한 사항, ⑧ 시설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⑨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기타 대학(교)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⑪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 ⑫ 대학 교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2. 주요 사업

대교협법과 대교협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따라 대교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그 양적인 팽창에 걸맞은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자격체제 구축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형적으로는 많은 고등교육 희망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참여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교육이 이러한 인적자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걸맞은 질적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대학평가, 대학입학지원, 정책개발 및 협의조정, 교수 임면·통계·교류, 그리고 교수·직원 연수이다. 먼저, 대학

평가는 크게 대학종합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대학입학과 관련된 사무로는 대학입학 사무관리 지원, 대학입학 연구·발전·심의, 대학입학 정보자료 발간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개발 및 협의조정 업무로는 각 대학의 공통과제 및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정책건의를 하고 있고, 각종 국내외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교수 임면·통계·교류 업무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6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 보고를 받고 있다. 대학교원 현황 통계, 교수 교류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계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직원 연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교협은 대학진학정보센터, 교수채용지원정보, 대학교직원연수, 대학평가와 관련된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통계에 대한 정보망 구축은 시작 단계이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문인정망(APARNET: Asia-Pacific Academic Recognition Network)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V. 대교협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교협은 대학평가, 대학입학지원, 정책개발 및 협의조정, 교수 임면·통계·교류, 그리고 교수·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수행이 과연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요구된다. 즉, 대교협의 법적 성격과 위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곧 대교협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논의의 통해 대교협의 정체성이 도출되어야 정부가 대교협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와 영역, 대교협의 역할 기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1. 대교협의 발족 배경

대교협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교협의 발족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교협의 발족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7.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초래한 혼란과 대학의 불만 등을 정부의 직접 개입(direct intervention)이 아닌 대학간 협의와 상호협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1982년도에 정부차원에서 구상된 것이 바로 오늘의 대교협이다. 즉, 정부와 대학사회와의 중간기구(intermediary body)로서 구상된 것이 바로 대교협인 것이다.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되었으나, 1984년 대교협법의 제정으로 대교협은 특별법에 의한 사단적 특수법인이 되었고, 정부와 대학 간의 중간조정기관으로서 대학 상호 간의 협동과 연구 및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대교협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대교협법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대교협이 단지 대학들의 자율결사체라는 의미를 넘어 대학과 정부 간의 중간기구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이다. 즉, 대교협은 설립 당시부터 그 존재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대교협의 성격

대교협의 발족 배경과 그간의 사업을 토대로 볼 때 대교협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 결합체인 규제(self-regulation)기관으로서의 대교협, 정책연구기관(policy research institute)과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로서의 대교협, 정부의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대교협이 그것이다.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대교협이다. 대학시장의 실패가 있을 경우 정부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고, 특히 우리처럼 국가중심 정치·행정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발전 역사와 민간화·자율화라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개입보다는 대학 자율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여 교육부도 2004년 12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학구현을 위해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제1단계에서는 개별 단위과제의 기능 전부 또는 기능 일부분을 자율화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규제완화·폐지·위임·이관·위탁 등을 추진하고, 제2단계로 고등교육 관계법령 등 개편을 통해 교육부의 업무 또는 기능을 분명히 규정하고, 제외된 업무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사항으로 선언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자율화 추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규제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대교협의 역할이란 바로 정부와 대학 간의 중간조직으로서 이러한 자율 규제기능을 수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정책연구기관과 정보센터로서의 대교협이다. 이는 대교협이 대학의 현황과 고등교육의 변화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부에 정책건의를 수행하는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학의 정보를 일반 국민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정부의 위탁사업수행자의 대교협이다. 정부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 사무로서 정부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교협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위탁

앞으로 설립될 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평가에 대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교협의 평가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교협의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기업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평가가 중요하다.

사업수행자로서의 성격이 대교협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대학자율 규제보다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더 중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대교협의 역할 기대

대교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발전을 위해 대학의 자치정신 회복과 대학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교협의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등교육 동향이 질 보증, 자격의 호환성과 통용성 등이 때문에 대교협도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서 기존의 역할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자율규제(self-regulation)기관으로서 대교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교협이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가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교협은 이미 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를 이미 수행하여 오고 있다. 대교협 평가의 성과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측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교육부도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교협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설립될 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평가에 대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교협의 평가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교협의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기업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평가가 중요하다.

둘째, 학위를 포함한 자격의 호환성과 통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격의 호환성과

통용성은 학생과 성인 근로자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학습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이수결과에 대한 평가·인정 역시 중시되고 있다. 마침, 대교협이 주도적으로 APARNET⁶⁾에 참여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주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학문 분야만이 아닌 직업·기술 교육 분야 자격의 호환성과 통용성 확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질 보증(quality assurance)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 갖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컨설팅과 상담 기능을 대교협에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2006년 5월 '국립대학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현장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교육부가 모두 맡아 수행할 수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는 대교협과 같은 자율협의체가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정책연구기관과 정보센터로서의 대교협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통계와 정보의 확충이며, 보고통계뿐만 아니라 조사통계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학에서 외국어를 활용한 수업 현황, 대학의 현장실습과 산학협동 현황, 대학의 중도 탈락생 현황,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students with disabilities)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어느 정도나 보장하고 있는지, 교수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학의 양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통계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교육·연구·산학협동·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통계의 수집과 가공은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계업무는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대교협은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통계를 수집·조사·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나 일반통계로도 가능할 것이다.

대교협이 수집하는 정보에는 위와 같은 통계나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대학의 입시와 학사관리, 연구, 산학협동 등에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물론 외국 등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동향에 대한 자료조사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고, 이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대교협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센터(clearing house)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 대한 정보·자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정확한 현황과 사실에 바탕을 둔 정책연구가 가능하고 정책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되며, 그에 따라 대학이나 정부에 적실성이 있는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대교협이다. 위탁사업수행자로서의 역할은 사안에 따라

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문인정망(APARNET: Asia-Pacific Academic Recognition Network)

다를 수 있다. 현재는 사립대학 교원임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업무가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교협과 교육부 간에 신뢰가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역량이 충분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전문 대학교육협의회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등도 회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Ⅵ. 나가는 글

이상에서 대교협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맞는 대교협의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임의단체가 아닌 독자적인 설립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교협은 수시로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하고, 동시에 자율협의체로서 대학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또 교육부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는 소통의 기체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철**

한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서 석사학위를, 단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재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학술원 사무국장,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 실장, 재정기획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으로서 재직 중이다.